

규제혁신의 지향과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 규제거버넌스 방안 제3차 포럼

(사)좋은규제시민포럼 강영철 이사장

2025년 11월 20일



강영철 이사장

좋은규제시민포럼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요 경력

- 現 좋은규제시민포럼 이사장 (2024-현재)
- 現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2025-현재)
- 現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2017-현재)
- 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2014-2017)
- 前 풀무원 해외부문 사장, 전략경영원장 (2008-2014)
- 前 매일경제신문사 경제부장, 논설위원 등 (1983-2003)

좋은규제시민포럼 소개

설립 목적

'좋은 규제 원칙'에 입각한 시민주도 규제감시 기구.
대한민국이 모범적 규제를 운영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

주요 활동

국회 규제입법 감시

정부 규제집행 감시

합리적 규제대안 제시

규제청원 지원

시민참여 거버넌스

주요 성과

시민주도 규제감시 활동을 통한 52주 연속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 발간.
13대 좋은 규제 원칙 제시.



제2회 정기포럼



규제혁신 세미나



디지털 플랫폼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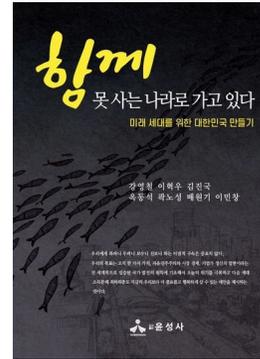
주요 저서



좋은 규제의 조건

2023년, 윤성사, 공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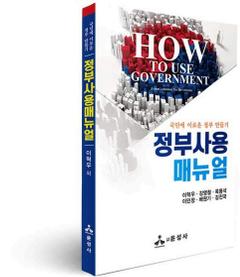
- |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제시
- | 슬기로운 규제 청원 5대 전략
- | 시민과 기업 주도 규제개혁 방안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2021년, 윤성사, 공저

- | 한국 경제의 위기와 도전과제 분석
- | 미래 세대를 위한 경제성장 모델
- | 규제개혁과 국가 발전의 상관관계



정부사용매뉴얼

2022년, 윤성사, 공저

- | 유능한 정부 만들기를 위한 제언
- | 시장과 정부운영 오해 바로잡기
- | 국민에 이로운 정부 운영 지침서



대한민국, 넥스트 레벨

2023년, 21세기북스, 공저

- | 전문가 12인의 국가 성장 제언
- | 한국 사회 도전과제와 해결방안
- |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기업을 돕겠다는 거짓말"

매일경제, 2025년 10월

- 밸류업 정책 1년 후 PBR 1배 미만 기업 비중 증가 (45.7%→54.6%)
- '진성 규제'(핵심규제)의 개선 없이 밸류업 정책은 효과 없음
- 대기업집단규제, 다중대표소송제, 상속증여세 등 핵심 규제 개선 필요

"규제개혁은 모두 잔챙이만 개선하고 자화자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잠재성장률 3%, 기업없이 가능할까"

매일경제, 2025년 8월

-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약 3% 수준으로 낮아진 상황 분석
-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정부나 가계만으로는 성장률 제고가 어려움을 지적

"기업활동 활력 회복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다"

"바보야, 문제는 규제야!"

매일경제, 2025년 4월

- 한국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 4.3% vs 미국 13.34% (3배 차이)
-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감사보수 5년간 2.4배 증가 (1,080억→2,579억)
- 인증제도 112개→246개로 2.2배 증가, 기업 경쟁력 저해

"규제는 침묵의 암살자다. 경제의 펀더멘털을 갉아먹는다."

"세상에 없는 사회주의 국가, 한국"

매일경제, 2025년 3월

- 한국의 시장경제 체제 내 상속세·부자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 기업과 부자가 국외로 이탈하는 구조적 문제점 지적
- 시장경제 활성화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경제 체제와 현실 정책 사이의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적 올바름과 경제적 올바름"

매일경제, 2025년 5월

- 한국은 PC(정치적 올바름)가 신성불가침 영역이 되어 규제환경 고착화
- EC(경제적 올바름)로 모든 정책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평가 필요
- 진보적/보수적 정책 모두 동일한 경제적 잣대로 검증해야 함

"분명한 점은 EC가 PC를 규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 성공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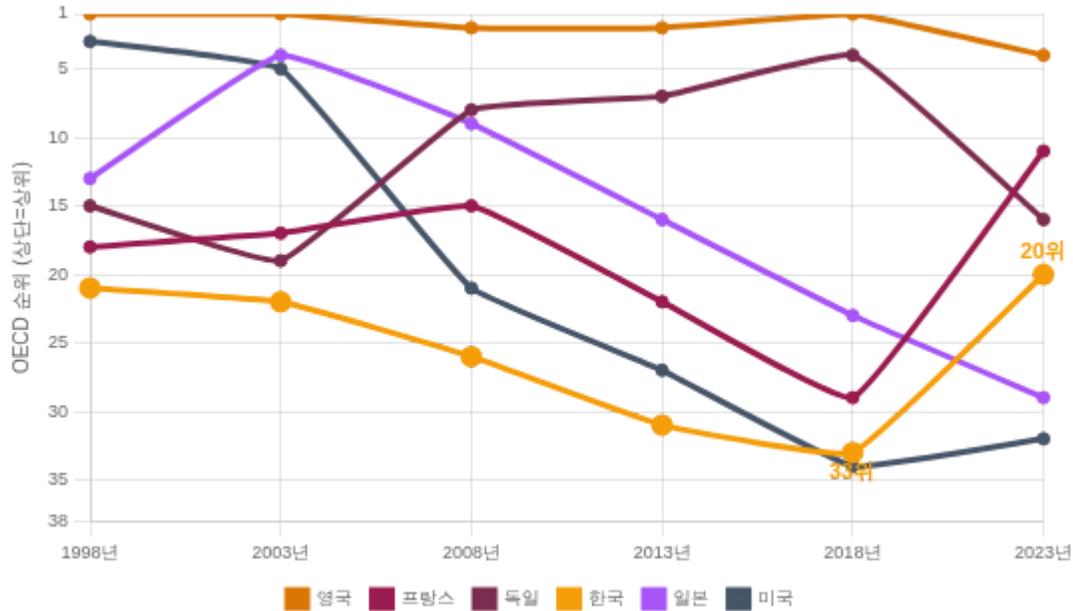
매일경제, 2025년 7월

- 규제개혁을 위한 구체적 성과목표 설정의 중요성 강조
- 규제개혁 집행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제시
- 핵심규제 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 실행론 전개

"모니터링과 평가체계 없는 규제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규제현실과 도전

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 국가별 순위변화



시장경쟁자유도를 나타내는 대표지표인 OECD PMR지수, 2023년 20위권 회복

자료: OECD PMR Rankings(1998-2023), OECD 38개국 중 순위

통계에 가려진 진실 :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수준은 OECD 최약

규제(정부개입)에 의한 왜곡

정부소유에 의한 왜곡

15위

기업활동 개입

36위

규제영향평가

3위

진입장벽

행정규제 부담

14위

서비스네트워크 진입장벽

24위

무역투자 장벽

36위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3년 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 평가결과, 한국은 OECD 38개 국 중 20위로 역대최고 기록, 2024.7.10. 이혁우, '2023 OECD PMR 지수로 본 한국의 규제현황' (좋은규제시민포럼, 규제와 시민 보고서, 2024, 7.22에서 재인용)

그 결과, 기업부담지수는 언제나 1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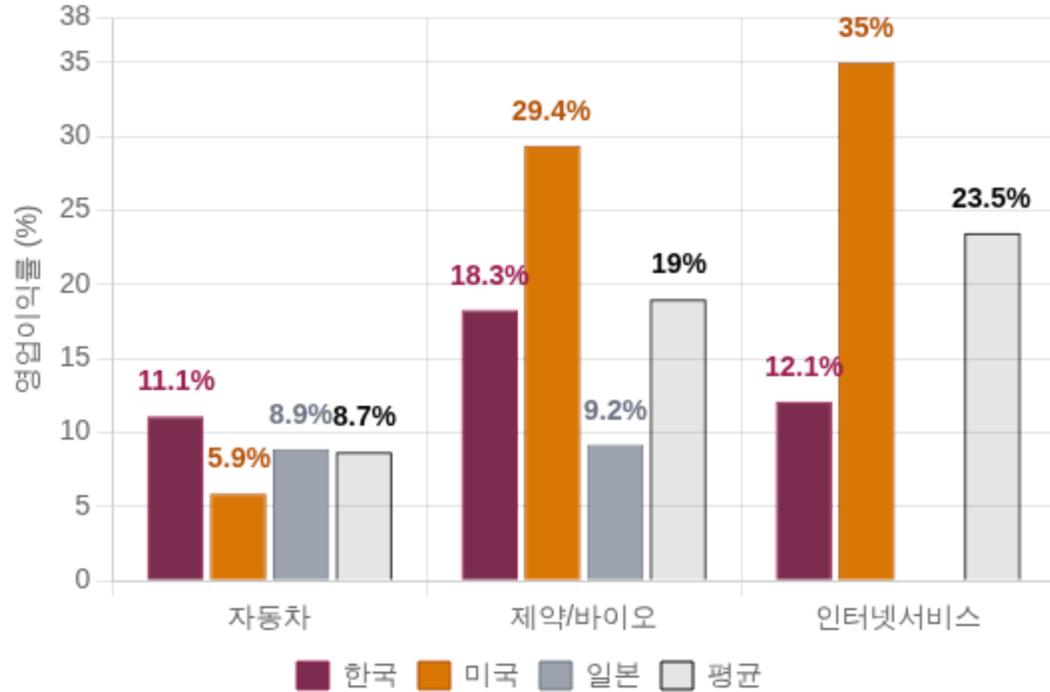
기업부담지수(BBI)는 조세, 준조세, 규제 부담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부담 수준을 나타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15-2025)

규제는 기업 건전성을 좌우, 운영 및 자본비용 증가로 수익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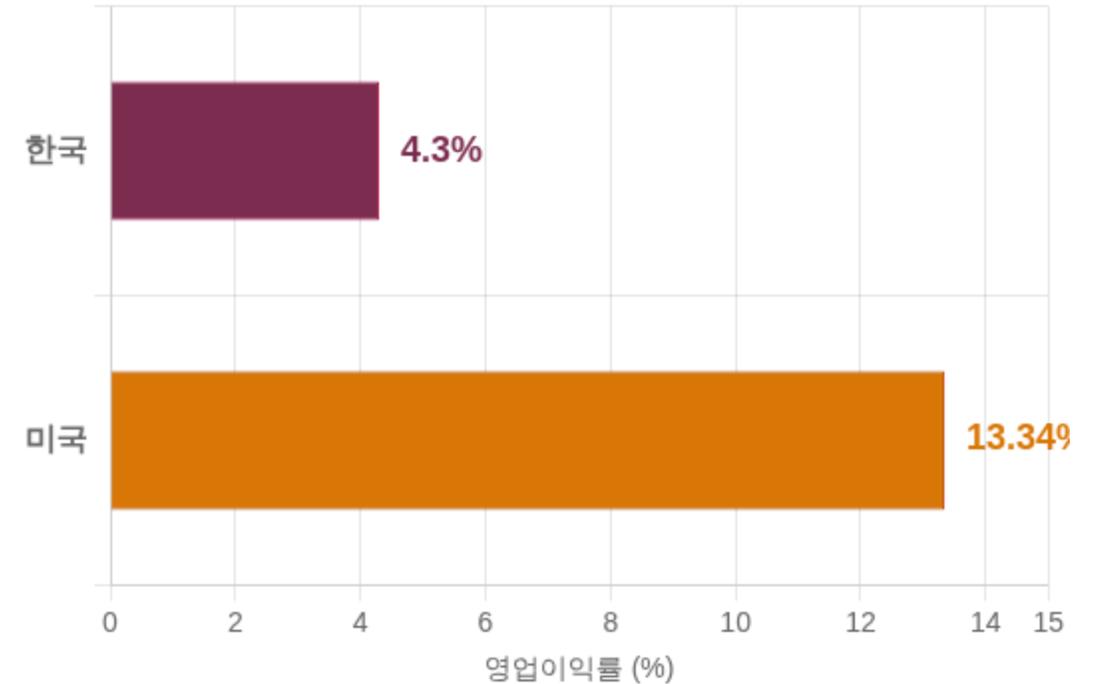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 비교 (2024년 상반기)



한국은 자동차 업종에서 강세, 제약/바이오와 인터넷서비스는 미국 대비 낮은 수익성

자료: 경총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비교」 (2024.9)

한국 vs 미국 상장사 평균 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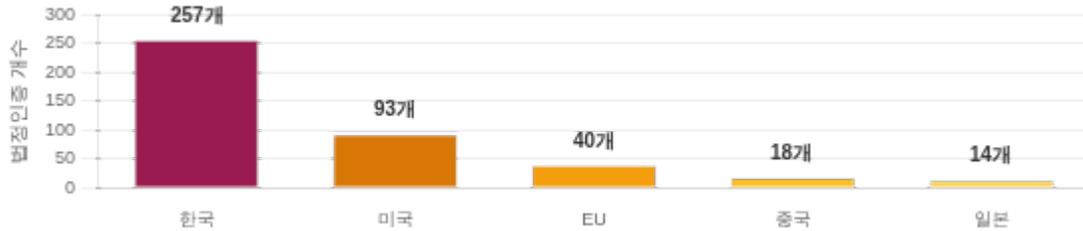


미국은 한국의 3배 수준으로 높은 수익성 확보

자료: 한국 - 매일경제 강영철 이사장 칼럼 (2025년 4월), 미국 -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 분석

결과적으로 수익 악화 :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들을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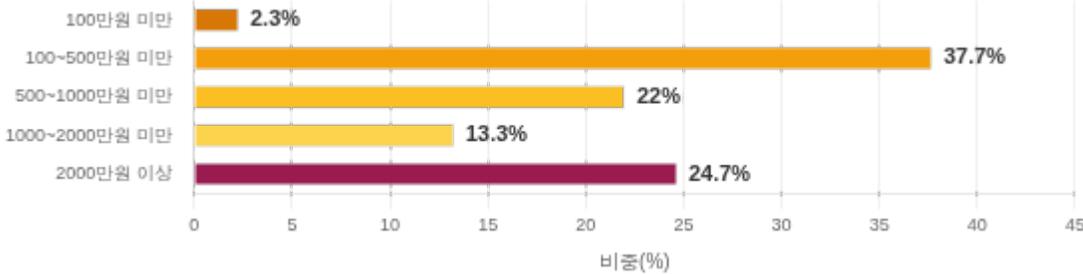
전체 법정인증 현황 (한국 257개 vs 해외)



한국 257개 vs 일본 14개 (18배)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인증규제 정비방안 (2024.2.27)

중소기업 신규 인증 취득 비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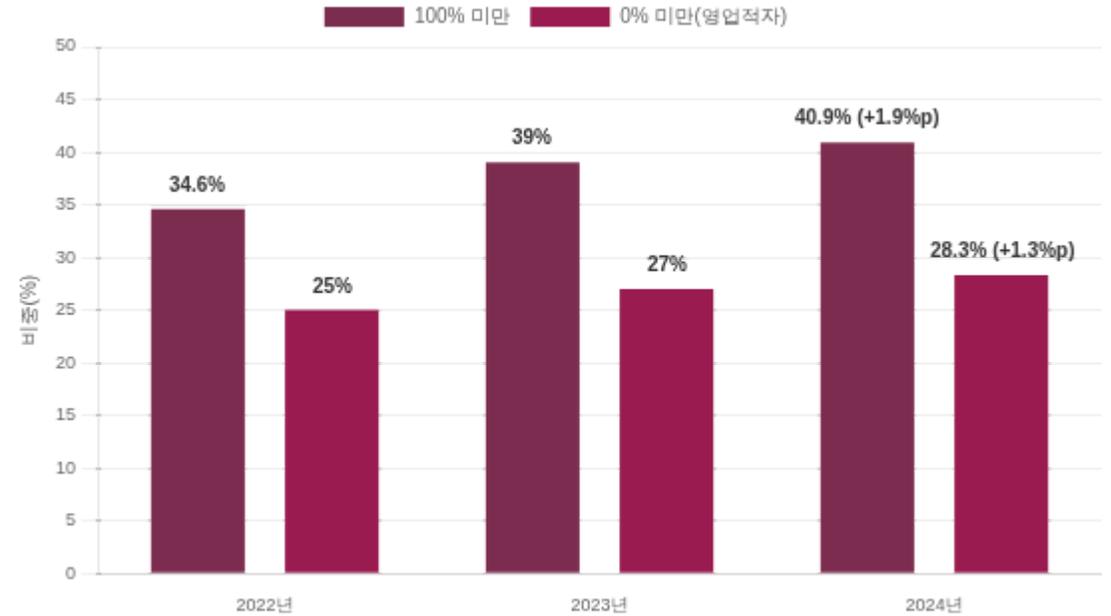


중소기업 24.7%가 인증 취득에 2천만원 이상 소요

중소기업 평균 2.9개 인증 보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제도 실태조사(2022)

이자보상비율 구간별 기업수 비중



100% 미만 기업 40.9%, 영업적자(0% 미만) 기업 28.3%

출처: 2024년 기업경영분석결과(한국은행)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

왜 지금, 왜 서울인가

왜 지금인가

경기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비용 없는 성장정책이 필요한 시점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률 4.3%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

『함께 못사는 나라로 가고 있다』 세대역전 위험과 정책 실패 경고 - 규제개혁 미루기의 기회비용 증가

지금 손대지 않으면 경제 회복 기회 상실과 세대 간 갈등 심화

왜 서울인가

『넥스트 레벨』 성장동력 재정렬 논지를 도시 차원으로 번역

서울시가 허가·조례 표준을 바꾸면 국가 파급력이 극대화

청년 삶 기반의 공간 재구축 - 규제개혁을 통한 도시 기능 혁신

100일간 123건 규제철폐 성과로 입증된 실행력

규제개혁의 성공모델을 서울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 서울시 규제개혁 → 전국 확산 → 국가 경쟁력 회복의 전환점
- 세대역전 위험 완화를 위한 시급한 규제개혁 필요

- 대한민국 최대 경제권역으로서 규제개선 효과 극대화
- 청년 삶 기반의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

규제개혁 실패의 원인 — 핵심규제 회피 + 집행불감증

핵심규제 회피

- 눈에 띄는 주변부 규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사소한 규제만 손질
- 구조적 핵심규제 회피: 대기업, 금융, 노동 등 핵심 영역의 규제는 방치
- 수량적 성과주의: 질보다 양, 규제 개수 늘리기에 치중

집행불감증

- 서류상의 개혁: 현장 집행력과 후속조치 부재
- 관료의 책임회피: 적극행정 보다는 안전한 관행 유지 선호
- 부처간 협업 부족: 칸막이식 운영으로 종합적 개혁 미흡

『정부사용매뉴얼』이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책실패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 부재

조령모개 국정운영
일관성 없는 정책과 규제

지방자치 30년, 고삐 풀린 동네 권력
책임성 없는 지방규제 확산

규제개혁의 필수 요소: 입법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1 입법실명제 도입 필요성

국회의원 개인 발의 중심의 법안 제출로 정당 차원의 체계적 검증 부족

발의자 책임성 강화로 대안 없는 규제 신설 방지
규제 입법의 정치적, 정책적 책임소재 명확화

2 기업규제백서 발간 효과

중복·과잉 규제로 인한 기업 경영환경 악화 현황 가시화

규제 정보 투명성 확보로 불합리한 규제 발견 용이
기업의 의견수렴 및 피드백 채널 확보

핵심규제(Core)의 정의 — 무엇을 먼저 고칠 것인가

성장경로를 직접 제약하는 핵심규제(Core Regulations)를 우선 개선해야



입지규제

용도지역 제한, 수도권 규제



인허가 규제

중복 인증, 과도한 서류



데이터/AI 규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 제한



모빌리티 규제

택시면허, 공유 서비스 제한

핵심규제 선별 3대 지표

체감

시민과 기업이 직접 느끼는 규제 부담의 정도

- 실질적인 불편, 비용 발생, 기회 상실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영향력

파급

하나의 규제 개선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크기

- 투자 유발, 고용 창출, 시장 확대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대체

규제의 대체 가능성 및 전환 용이성

- 금지·통제 방식에서 성과기준·사후관리 등으로 전환 가능한 정도

좋은규제의 원칙

포럼이 추구하는 좋은규제는 국민경제의 자율, 경쟁, 창의를 촉진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규제로서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1 좋은규제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2 좋은규제는 안전과 성장을 함께 추구한다.

3 좋은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며 기술 발전을 제한하지 않는다.

4 좋은규제는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한다.

5 좋은규제는 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 선택된 것이다.

6 좋은규제는 다른 규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7 좋은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다.

8 좋은규제는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을 정한다.

9 좋은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10 좋은규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11 좋은규제는 분명한 성과목표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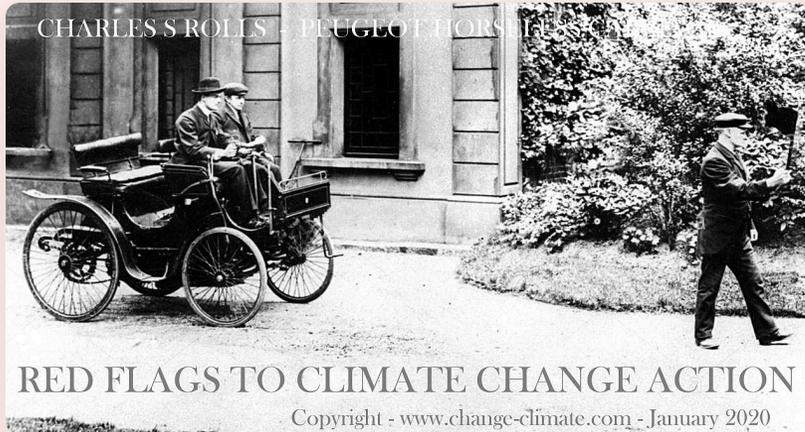
12 좋은규제는 낡고 비현실적 요인을 제거한다.

13 좋은규제의 사회적 혜택은 규제비용보다 크다.

규제혁신의 지향 1_그린플래그로의 전환

레드 플래그 (현행)

- 원칙적 금지** - 법령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것만 가능
- 사전 규제** - 시작부터 엄격한 통제로 혁신 저해
- 지연과 불확실성** - 장기간 인허가 과정으로 시장 진입 지연
- 일회성 예외** - 샌드박스도 임시적 허용에 그침



1865년 영국 레드플래그법 - 혁신을 막은 대표적 규제 사례



그린 플래그 (개선)

- 원칙적 허용** -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가능
- 사후 관리** -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우선 시작 허용
- 신속한 결정** - 패스트트랙 인허가로 시장 테스트 가속화
- 영구적 개선** - 검증된 혁신은 법·제도로 영구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그린라이트 신호등 - 규제완화의 상징

규제혁신의 지향 2_EC가 PC를 규율

정치적 올바름과 경제적 올바름



정치적 올바름

안전,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 여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의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



EC가 PC를 규율



경제적 올바름

정책이나 대안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판단

"필자가 주장하는 EC는 경제적 맥락에서 어떤 정책이나 대안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대립적 주의·주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실질적으로 경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올바름을 판단하자는 것이다."

- 강영철 이사장 (매일경제, 2025.05.28)

경제적 올바름(EC)의 판단 기준

투입 대비 산출 극대화 (정책 생산성)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 즉 정책의 생산성이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비용대비 혜택, 즉 생산성이 높은 법안이 경제적으로 올바른 법안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적 올바름의 잣대를 들이댄 대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또 하나의 기준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가다."

"성장이 없으면 PC도 없다."

"모든 국회입법발의안에 대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울시 규제개혁과 중앙정부 규제개혁 비교

서울시 규제개혁 특징점

현장 밀착형 접근

- 시민 생활과 직접 맞닿은 현장에서 불필요한 규제 발굴
- 100일간 하루 1건 이상, 총 123건의 규제 철폐 성과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력

- 의사결정 체계가 단순하여 규제개선 소요기간이 짧음
- 다양한 시범사업과 현장 실증을 통한 빠른 검증 가능

시민 체감도 높은 개선

- 일상생활과 밀접한 규제부터 우선 개선
- 소극적 행정관행 개선에 중점

중앙정부 규제개혁 특성

획일적 규제 접근

- 전국 단위 일괄 적용으로 지역별 특성 반영 어려움
- 현장과의 거리감으로 실질적 문제점 파악에 한계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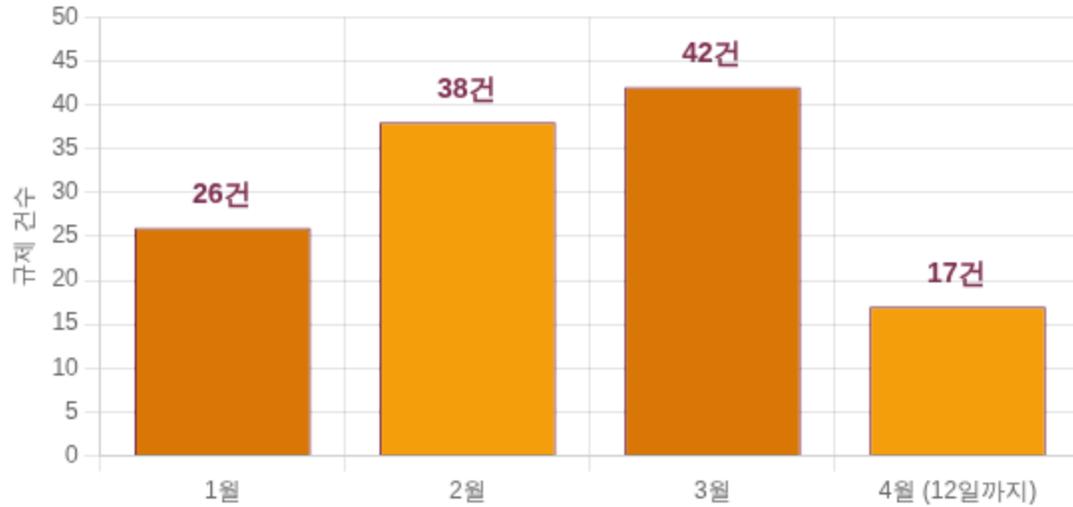
- 다수 부처 협의 필요로 의견 조율에 장시간 소요
- 부처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 약화

장기간 소요 및 효과 지연

- 법령 개정 소요시간이 평균 1.5년 이상
- 입법 과정에서 핵심 내용이 변질되거나 효과 약화 사례 빈번

서울시 규제거버넌스 혁신 방안

규제철폐 100일 성과



100일간 총 123건 규제 철폐, 하루 1건 이상

출처: 서울시 발표 (2025.4.13), 총 2,538건 제안 접수

365 프로젝트 진행 현황



2025년 1월~8월 20일

138건

규제 철폐 완료

(365일 상시 규제혁신)

완료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핵심 전략

1 수요자 중심의 상시 규제 발굴시스템 구축

2 시민체감도를 고려한 심사와 체계적 관리

3 제도적 기반마련을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4 규제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시민 참여 규제발굴
규제발굴단 200명 운영

민생규제 샌드박스
신산업·민생 규제 유연화

시민참여형 규제감시의 5대 구성요소

1 투명 파이프라인

"All regulations should be easily accessible by the public. A complete and up-to-date legislative and regulatory database should be fre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a searchable format through a user-friendly interface over the Internet." (Section 2.5)

2 조가·다중 채널 의견수렴

"Actively engaging all relevant stakeholders during the regulation-making process and designing consultation processes to maximise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received and its effectiveness." (Section 2.2)

3 독립적 품질심사

"Quality control through the review of the quality of impact assessments and returning proposed rules for which impact assessments are inadequate" (Section 3.3)

4 데이터 개방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as far as possible, all relevant material from regulatory dossiers including the supporting analyses, and the reasons for regulatory decisions as well as all relevant data" (Section 2.2)

5 사후평가(PIR) 의무화

"Conduct systematic programme reviews of the stock of significant regulation against clearly defined policy goals, including consideration of costs and benefits" (Principle 5)

출처: OECD 권고(2012/2025), iREG·RPO 2025

멕시코 CONAMER: 전면 온라인 공개·응답 의무의 실천

특징

연방법에 따라 모든 규정 초안·RIA를 단일 포털(SiMIR)에 게시하고 최소 30일 의견수렴을 실시

기관은 코멘트 답변 의무 및 기록을 모두 공개

연방·주·시로 확장되는 국가 규제거버넌스 체계(헌법·일반법 기반)

규제 영향 분석(RIA)과 투명한 협의 과정을 모든 규제에 의무화

OECD 평가

"Mexico has robust practices in transparency and consultation in the rule making process. The COFEMER is obliged to make public all draft regulation and their RIAs from the moment it receives them, as well as all opinions from the general public on the subject."

"The generalised publication of a wide range of RIA-related documentation is possibly uniqu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출처: OECD Regulatory Policy in Mexico, 2014

CONAMER 단일 포털 (SiMIR)



<https://www.cofemersimir.gob.mx/>

성과: 연 6,000건 이상의 규제 제안이 투명하게 처리되며, 이해관계자 참여 활성화

EU 'Have Your Say': 초기 단계부터 여는 참여

특징

시민·기업이 초기 'Call for Evidence'-초안 영향평가-정식안에 걸쳐 의견을 제출

절차·결과는 단일 포털(Have Your Say)에서 투명하게 공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및 다국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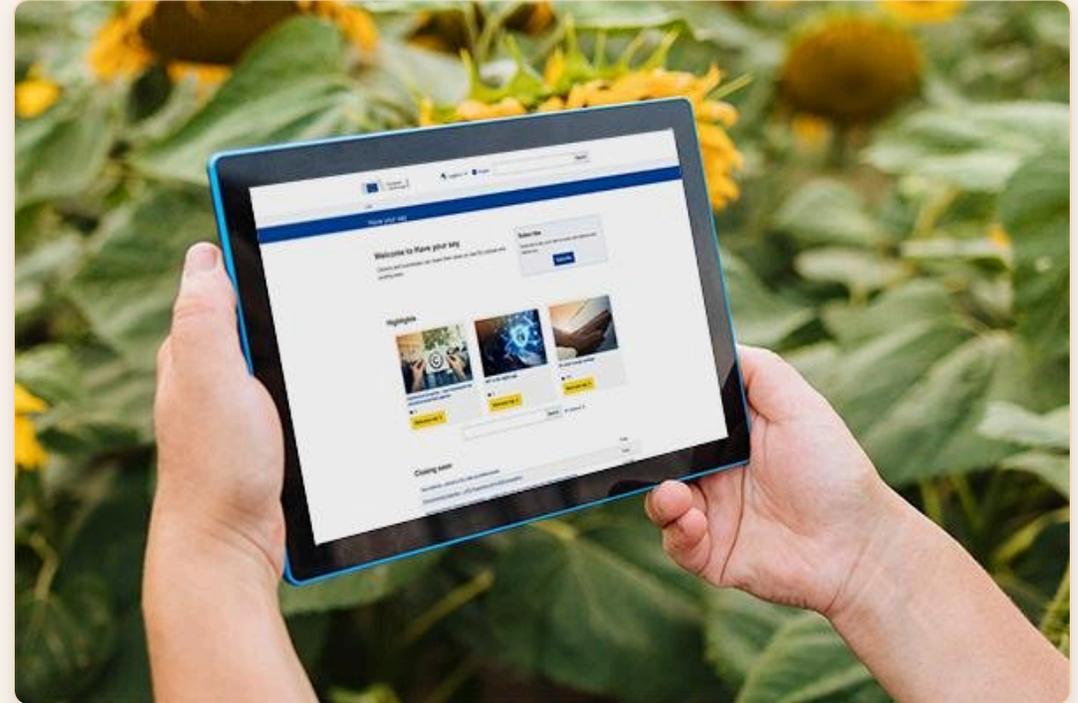
의견 수렴 후 8주 이내 요약 보고서 발행 의무화

OECD 평가

"The CfEs are conducted via the Public Consultations and Feedback ('Have Your Say') portal and are available in all official EU languages. When CfEs are accompanied by a questionnaire, stakeholders are given 12 weeks to respond to the consultations."

— OECD Better Regulation Practices across the European Union 2025

EU Have Your Say 포털



단일 창구로 EU 27개국 24개 언어 지원

"The EC has streamlined its process to engage stakeholders by bundling previously separate consultation steps on the same initiative (or evaluation) into a single 'Call for Evidence' (CfE) on the 'Have your Say' portal."

— OECD Better Regulation Practices across the European Union 2025

바르셀로나 Decidim: 개방형 플랫폼으로 규범 공동설계

특징

시가 설계·확산한 오픈소스 참여 플랫폼으로 시민이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

규범·계획·조례의 공동설계, 투표, 피드백 및 추적 기능으로 투명성 확보

시민참여 가이드와 상설참여기구 운영으로 지속적인 시민 참여 보장

AWARD Sharing Cities Award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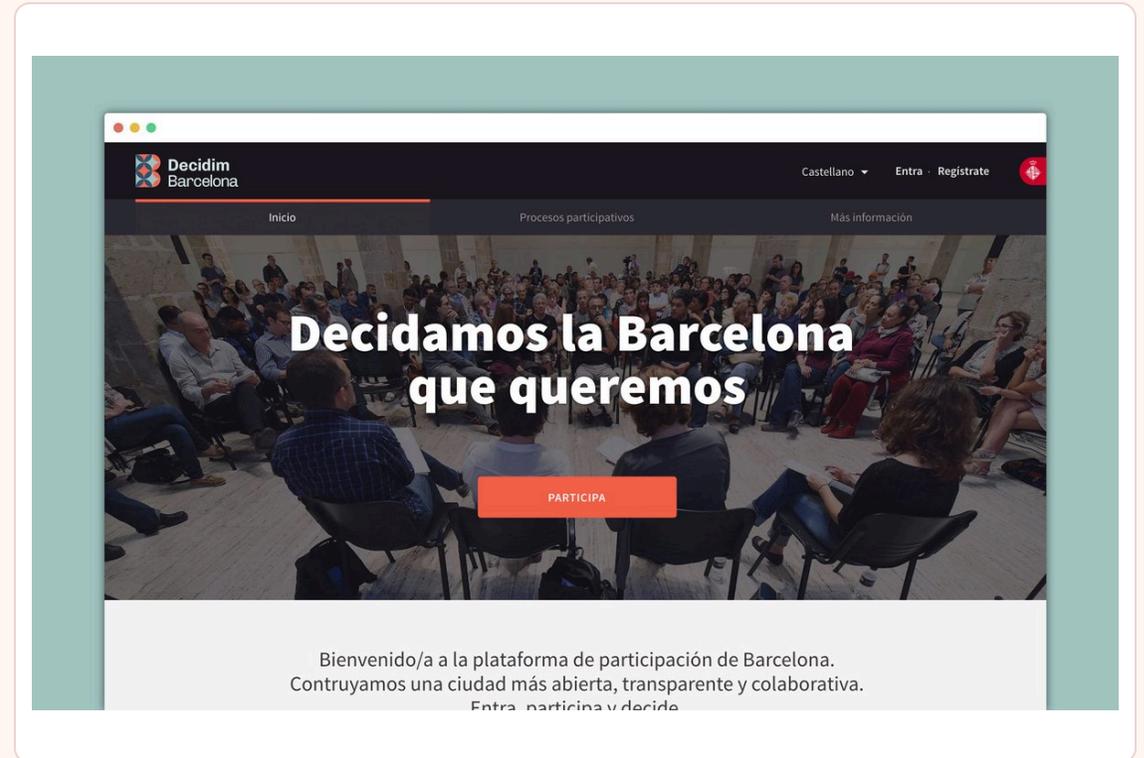
"The Decidim project received the second award in the category of 'the most innovative open source software' in the Sharing & Reuse Awards (#SRawards2019). Organiz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hese awards promote the sharing and reuse of computer solutions between public administrations."

- European Commission, 2019

AWARD Democratic Quality Award 2017

"How are decisions taken on decidim.barcelona?, is the project that has received one of the awards for Democratic Quality 2017 given by Barcelona City Council, endowed with 13,000 euros."

- Barcelona City Council, 2017



<https://decidim.barcelona/>

캐나다 Gazette: 코멘트 공개·열람의 제도화

특징

연방 'Canada Gazette' Part I에 제안 규정 공고 → 누구나 온라인 코멘트 가능

마감 후 코멘트 전체와 기관 답변을 모두 공개

2022년 온라인 코멘트 기능 도입으로 규제 시스템 현대화

"Canada, under recent reforms, has attempted to make public consultations more dynamic, interactive, and transparent for public stakeholders."

—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5



<https://gazette.gc.ca/consult/consult-eng.html>

서울시의 역할_도시경쟁력의 상승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 (GPCI 2024)

순위	도시	점수	비고
1	1 런던	1,632.5	10년 연속 1위
2	2 뉴욕	1,554.9	10년 연속 2위
3	도쿄	1,489.8	
4	파리	1,425.3	
5	싱가포르	1,392.1	
6	6 서울	1,372.5	2024년 6위 회복

출처: The Global Power City Index 2024,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4 Economic Freedom (경제적 자유)

서울(1) > 뉴욕(2) > 런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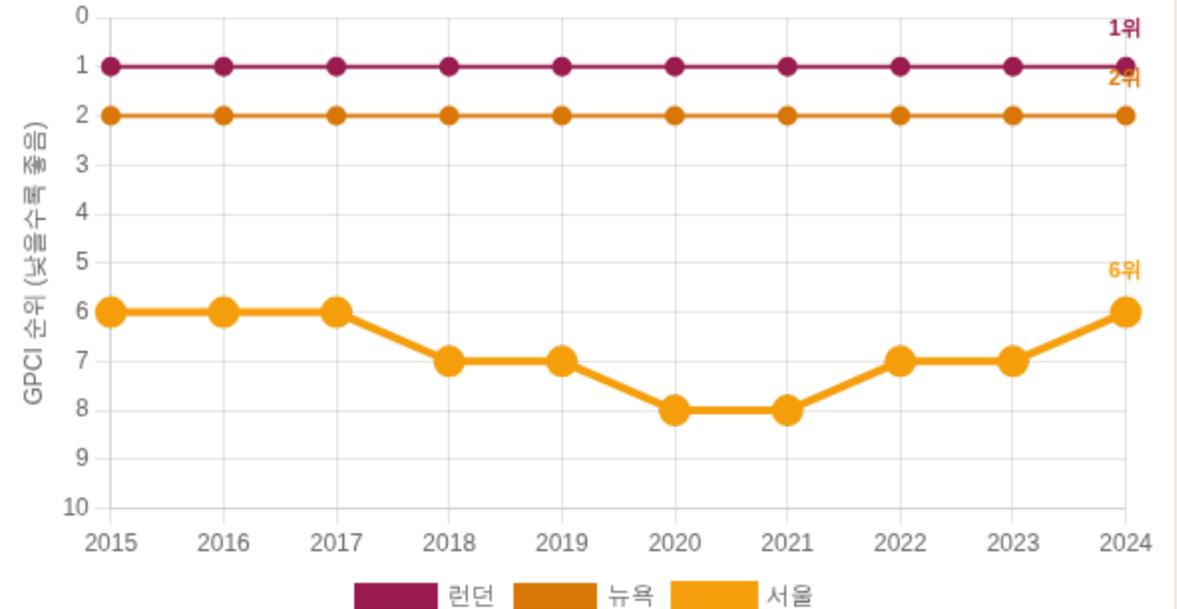
근거 점수: 한국 73.1(세계 14위), 미국 70.1(25위), 영국

#12 Corporate Tax Rate (법인세율)

뉴욕(1) > 서울(2) > 런던(3)

기준: 미국 연방 21%, 한국 24%, 영국 25%

10년(2015-2024) 도시경쟁력(GPCI) 추세



출처: GPCI 2015-2024 연례보고서

#13 Political/Economic/Business Risk

서울 = 뉴욕(공동 1) > 런던(3)

근거: Doing Business 2020 점수 한국 84.0(5위), 미국

#46 Social Freedom & Equality

런던(1) > 뉴욕(2) > 서울(3)

사회적 자유·평등 (4개 지표 평균)

지표 정의(공식): GPCI는 모리기념재단이 6대 기능(경제·R&D·문화교류·생활·환경·접근성) 70개 지표로 세계 주요 도시의 '자기장(magnetism)'을 평가하는 연례 공식지수.

출처: The Global Power City Index 2024, The Mori Memorial Foundation

서울시의 역할_도시경쟁력의 상승

뉴욕시 규제개혁 시민참여시 활용가능한 자료

NYC Rules

시 규칙 제·개정 공식 포털. 제안된 규칙 열람, 의견 제출, 공청회 일정 확인.

시 규칙은 **CAPA(시 헌장 45장)**에 따라 제정되며, 안내 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최소 60일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시민 참여 창구로 가장 실용적.

City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CAPA 원문 - 뉴욕시 규칙제정의 법적 근거(시 헌장 Chapter 45).

절차·공고·공청 의무 등 규정 확인 가능.

The City Record Online (CROL)

시의 공식 고시지 전자판. 규칙(제안·채택), 공청회, 회의 등 각종 공고를 검색·열람.

고시 항목이 명확히 적혀 있어 **규제 동향 추적에 유용**.

City Record 데이터셋

CROL의 공고를 데이터셋으로 제공(다운로드·API).

규칙·공청회 공고를 **시계열로 분석**할 때 유용.

NYC Open Data 포털

시 전 기관의 공개 데이터 허브(검색·다운로드·API).

규제 집행·단속·민원 데이터 등 **규제정책 보조지표**를 발굴할 때 기본 관문.

OATH

Office of Administrative Trials and Hearings - 시의 독립 행정재판소.

청문 안내, 결정문 검색(행정위반 사건), 사건 상태 데이터셋 제공: **규제 집행의 실제 분쟁·결과**를 살필 수 있음.

Business Owner's Bill of Rights

사업자가 단속·점검 등에서 보장받는 권리 안내(시 공식).

현장 **규제 준수·집행의 표준**을 파악할 때 참고.

Small Business First

규제부담 완화 이니셔티브 - 시 운영·SBS가 추진하는 30대 과제 등 공개.

소상공인 대상 **규제개선 정책의 진행상황**을 추적할 수 있음.

Mayor's Management Report

시 전 기관의 성과·책임성 보고서.

규제·허가·단속 업무의 운영 지표를 기관별로 파악할 때 기초 문서. 시 헌장 § 12가 법적 근거.

감사합니다

규제혁신의 지향과 서울시의 역할

(사)좋은규제시민포럼 강영철 이사장